

## 한국의 소득분배<sup>(1)</sup>

김 낙 년

본고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룬다. 첫째,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말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 시기와 단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배후에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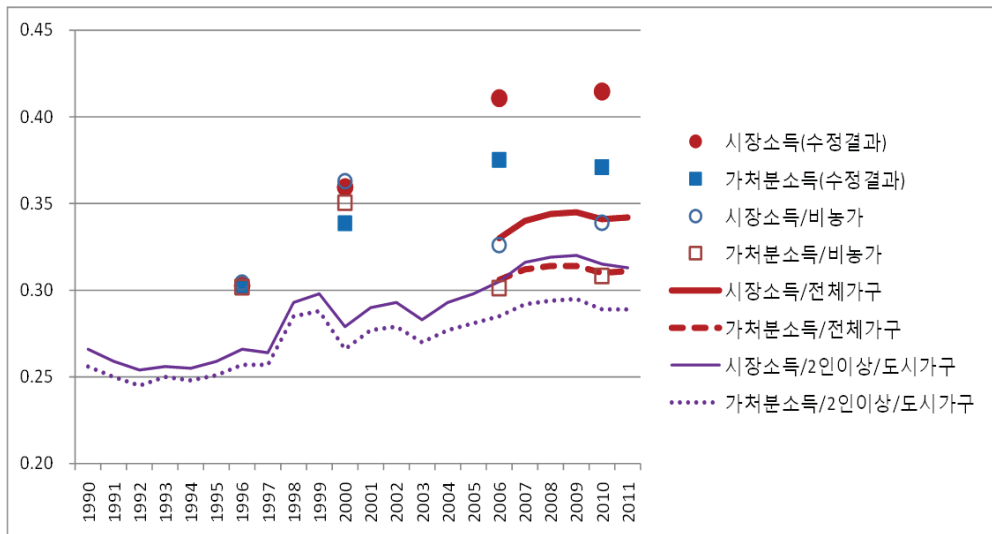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가 소득분배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가계조사의 커버리지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좁아져 대표성이 떨어지며, 일관성 있는 계열이 의외로 짧다.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에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었고, 파악된 경우에도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하다. 여기서는 가계조사가 파악한 소득을 소득세 통계(국세청)나 국민계정(한국은행)과 같이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대조하여 소득의 과소보고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이를 보정할 경우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얼마나 수정되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림 1〉이 그 결과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의 지니계수(실선은 시장소득 기준, 점선과 파선은 가처분소득 기준)를 참고로 제시하였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비농가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1996, 2000, 2006, 2010년의 4시점에서 수정 전과 후의 비교이다. 먼저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거한 1996, 2000년의 경우 통계청의 지표(그림 1에서 속이 빈 동그라미와 네모 표시)와 이를 보정한 지표(그림 1에서 속이 찬 동그라미와 네모 표시)가 큰 차이가 없으며, 시장소득(동그라미 표시)과 가처분소득(네모 표시)의 차이도 미미하였다. 다만 1996년에 비해 2000년에 시장소득과 가처분소

(1)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8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득 기준의 지니계수 차이가 다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2006, 2010년의 경우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여기서 수정된 지표 간에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에서 0.415로,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졌다. 이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가 된다. 그리고 1996년의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머물렀는데, 1996~2006년간에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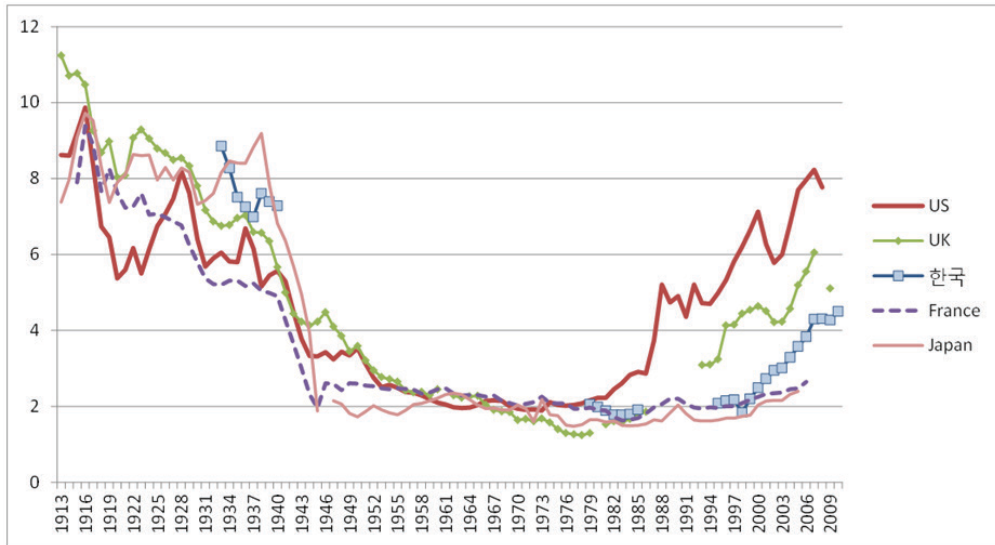
가계조사의 자료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소득집중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소득세 자료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장기에 걸쳐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소득구간별로 납세자의 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계조사와 같은 샘플조사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소득자의 상위 1%(20세 이상 성인인구 대비)뿐만 아니라 0.01%와 같은 최상위 소득층이 전체 소득(국민계정의 개인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에 상위 0.1%의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다.



자료: 김낙년 · 김종일 (2013).<sup>(2)</sup>

<그림 1>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수정결과의 비교

(2) 김낙년 ·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검토”, 『한국 경제의 분석』, 19. 2, 1-64.



자료: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김낙년(2012; 2013).<sup>(3)</sup>

〈그림 2〉 상위 0.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단위: %)

상위 1% 또는 0.01%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일부 기간을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근로소득에 한정할 경우 소득집중도를 1963년까지 소급하여 추계할 수 있다. 그것을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도 성장기를 통해 상승 또는 하락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해방 전에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해방 후 급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다시 급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도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어 간 영미형과 이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으로 분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집중도가 급상승하여 현재는 양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소득집중도의 추이는 〈그림 1〉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3)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 3, 75-114; 김낙년(2013):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55, 249-279.

거기에 제시된 수정된 지니계수 추이와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를 보면,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해방 직후의 시점인데, 식민지 지배 체제의 붕괴로 인해 당시 상위 소득층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일본인이 철수하였고,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몰락한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이 매우 높고 계층간 이질성이 컸던 사회로부터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이 시기에 불평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그것은 전시 하에서 진행된 근로소득 내부의 격차 축소(the Great Compression)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소득의 격감에 기인한 것이며, 그 요인은 우리나라와 달랐다.

두 번째 전환점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나며 소득불평등의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경제성장의 효과가 얼마나 저변으로 확대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이루어졌고, 비 농업 부문에서 빠른 고용의 증가와 임금상승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 방대한 규모의 이농이 발생하여 농촌에는 일손 부족과 기계화가 진전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는데, 그것은 성장의 효과가 농촌과 같은 저변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뜻한다. 그 결과 산업구조를 포함한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집중도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추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 성장기는 빠른 성장과 불평등도가 비교적 낮은 분배가 양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고, 저축률과 투자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비농업 부문 취업증가율 또한 크게 낮아졌는데, 거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이것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는데, 특히 중국과의 수교(1992년)로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 압박이 커졌다. 예컨대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교역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고성장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아 도태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업종이 늘어났다. 후자의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종래 고용증대를 주도해 왔던 제조업은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오히려 고용을 방출하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저임금 국가와의 교

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심화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ical changes)를 가속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구조의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경영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영미식 지배구조가 도입되었다. 대기업집단(재벌)에서는 계열사(또는 사업부)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대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경영의 책임과 함께 파격적인 보상과 스톡옵션이 주어졌다. CEO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에서도 종래의 연공주의 방식 대신에 연봉제와 인센티브 제도과 같은 성과주의 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의 보수 동향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없지만, 그 대안으로서 근로소득자 상위 0.1%(2010년에 16,971명이 거기에 해당)의 소득이 그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에 추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보수는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0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의 소득배율이 1960년대 말에 평균소득의 10배에서 근래에는 40배를 넘은 수준으로 급등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근래에 약간 상승(13배)하는 정도에 그쳤다. 두 나라간에 이렇게 뚜렷한 대조가 나타난 것은 기업 경영자의 선발을 둘러싼 외부 노동시장의 발달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주로 경쟁적인 외부 노동시장에서 선발되며, 특히 스타(star) 경영자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범용적인 기술보다는 해당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기술(firm specific human capital)을 중시하며, 기업 경영진도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한 자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경쟁적인 외부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와 같은 제도도 기업 내 임금격차의 확대를 막은 요인이었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근래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계열사간의 경쟁을 통한 CEO 시장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CEO 시장의 범위와 그 보수 인센티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중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의 영향인데, 특히 상층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율구

조가 변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소득세법상의 최고 세율은 1970년대 후반에 70%의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그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각 소득계층별로 그들이 부담한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을 구해 보면, 최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세율인하 효과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하 계층에서는 소득세 부담률이 오히려 올라가기도 했다. 그 동안 누진과세 하에서 과세 소득구간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위의 소득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현상(bracket creep)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크게 후퇴하였다. 이러한 소득세제의 변화도 상층으로의 소득집중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26

전화: (02) 2260-3273

팩스: (02) 2260-3978

E-mail: nnkim@dongguk.edu